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개발의 방향

이용균*

The Change of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and the Future of Development

Yong Gyun Lee*

요약 : 지역개발의 정책과 방향은 세계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은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서구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개발 정책에 내재한 성장 동력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 패러다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서구의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주의 시장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자본의 과잉축적, 노동자 계급의 빈곤 확대, 장기적인 불황과 실업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은 유효수요의 창출을 통한 성장과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에 의한 소비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와 재정적자는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의 한계로 등장하였고, 시장주의에 입각한 탈규제, 민영화, 시장개방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은 소득과 계층 간 불균형, 각종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야기하면서 대안적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래의 개발은 글로벌 및 지역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참여와 권한 부여가 확대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주요어 : 지역개발, 자유주의,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지속가능한 개발

Abstract : The policy and direc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re influenced by the circumstance of world economy. Through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has been recognized as the vital element of regional growt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paradigms of reg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actors and limitations of those development paradigms, and to derive the alternative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ed western countries expanded liberal market system through industrialization process, but experienced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 of poverty in the labor class, long term recession and unemployment. To deal with those problems Keynesian development policy was introduced to boost economic growth with effective demand and to increase of consumption with government welfare system. However, since the 1970s economic recession and budget deficit caused the limitation of Keynesian development policy, and neoliberalism development policy was introduced focusing on the deregulation, privatization, and openness in the market. However, the neoliberalism policy has derived various problems such as income and class inequality, and social conflicts and environmen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has to consider the decrease of gap both in the global and local level, and the increase of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endowment of authority for the mak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Key Words : Regional development, Liberalism, Keynesianism, Neoliberalism, Sustainable development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gyunlee@hanmail.net)

I.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은 세계의 경제적 상황과 국가의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추진된다. 개발(development)은 유럽의 계몽사상 확대와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유럽의 열강은 식민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미개한 식민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식민지 착취의 명분과 수단으로 작용하였다(Potter *et al.*, 2012). 개발은 근대주의(modernism)의 영향 속에 문명화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조효제 역, 2013).

개발은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었고(Broham, 1996), 1930년대 케인스주의가 등장하면서 개발은 국가 주도적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지역개발이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지역개발은 대학 연구 분야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 정책이 각 국가마다 지역개발의 기본 정책으로 정착되면서 지역개발은 일종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등장하게 된다.

패러다임은 연구나 정책 등에서 공유된 가치관을 갖고 전개되는 운동이다(이용균, 2006).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이유는 연구나 정책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 작용하고 이것이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지배적인 개발정책의 방향이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케인스주의 개발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은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에 해당한다. 지역개발은 한 사회의 생산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질서에 해당한다. 케인스주의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성장과 소득 분배가 주요 정책 목표로 대두되며,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면서 정부개입보다 시장원리가 강조된다.

지역개발 정책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데, 유럽의 근대 시기에 지역개발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상주의(mercantilism)와 자유주의(liberalism) 시장제도이다. 18-19세기 동안 유럽의 국가간 무역은 확대되고 있었고, 주요 열강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당시 국가는 시장에 대한 막대한 규제와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18세기 중상주의에서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개입

이라고 인식하였다(Broham, 1996). 무역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18세기말 영국과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8세기말 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국가의 시장개입 최소화라는 자유방임적 정책이 국가의 부를 가져오는 최상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유시장제도는 생산과 판매를 통해 개인의 이윤을 최적으로 유도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므로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를 때 국가의 부가 최대로 창출된다고 주장하였다(Smith, 1986). 자유시장제도는 인간 욕구의 충족, 자원이용의 효율성(utility), 자원이용의 관계를 시장논리에 따르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한다고 본다. 개인 이익의 최대화는 곧 국가 이익의 최대화를 의미하므로 자유시장제도 하에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본다(Broham, 1996).

자유주의 시장제도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라고도 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경제활동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결국 국가의 부를 확대한다고 보는 사회담론이 작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김준현, 2002). 즉, 자유주의 시장제도는 절대 권한을 지닌 국왕과 귀족의 시장경제 개입을 축소하고, 당시 서구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새롭게 등장한 시민 엘리트 및 자본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운영을 지지하는 것이다.

산업화는 양적인 성장을 가져오면서 자유주의 시장제도를 활성화시켜주었다. 하지만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자유주의 시장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Potter *et al.*, 2012). 산업화 과정을 통해 자유방임적 시장제도는 노동자 계급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자본가 계층으로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 자본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과 실업문제가 대두되었다.

19세기 산업화를 경험한 서구의 국가들은 다시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고, 빈곤층을 원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금정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착취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제도가 대표적인 국가개입의 사례에 속한다. 1929년에 미국의 뉴욕 증시 대폭락을 기점으로 대두된 세계대공황은 과잉생산에 따른 자유시장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시장실패라

고 함). 미국의 경우, 1929-32년 사이에 소득은 54%, 생산은 46%, 고용은 38% 감소하면서 자유주의 시장제도는 무너지게 되었다(Broham, 1996).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Keynes)는 자유주의 시장제도는 공급(시장)의 효율에 초점을 두면서 수요의 창출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여 과잉생산이 유발되고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이승환 역, 2006). 케인스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러한 고용창출이 다시 시장에서의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스의 주장에 따라 미국과 서부유럽에서는 정부지출의 확대를 통한 개발사업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지향하면서 소비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계대공황의 공포를 벗어나게 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균형을 통한 고성장을 지향하던 케인스주의 시장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 국제적 시장경쟁의 심화, 소비패턴의 급변화를 경험하면서 위기에 직면한다. 석유가격의 폭등과 대량생산의 위기는 수요확대를 통한 위기해소라는 케인스주의 정책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는데, 기존의 경기침체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전개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케인스가 주장하는 투자의 확대는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확대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80년대 접어들어 미국과 영국의 보수정부 등장과 자유주의 시장제도로의 복원을 주장하는 자본가 계층의 힘에 의해서 정부의 재정축소와 시장 자유화가 전개되면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시장제도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 시장제도에서는 시장원리를 지향하면서 규제완화,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세감면, 복지제도의 축소를 지향한다(Martin and Sunley, 1997). 시장자유주의로의 환원은 세계시장의 통합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세계경제의 통합 즉, 세계화(globalization)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분배의 측면을 소홀히 하고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구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개발 정책에 내재한 성장 동력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 패러다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2장에서는 자유주의 시장제도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본다.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의 한계를 토대로 4장은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5장은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의 한계를 다루고, 6장의 결론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의 대안과 미래 개발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II.

절대왕권 하에서 발달해 온 중상주의는 무역을 통해서 자본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절대왕권을 반대하는 시민계층이 등장하고 시민계층은 시장에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의 양적 성장은 자유로운 시장제도의 장점을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유주의가 서구사회의 경제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으로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는 개인이 간섭 없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이승환 역, 2006). 자유시장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만족을 최대로 추구하게 된다. 만족추구를 위한 강한 동기는 일의 효율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윤을 최고로 창출하기 위해 상품선정과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져온다. 자유시장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 국가 총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개인 이윤을 최대한 추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가의 부가 창출된다. 또한, 자유시장은 시장에서 상품의 포화가 발생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 생산량이 증대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자유시장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면서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Smith, 1986).

리카르도는 스미스의 견해를 토대로 비교우위를 통한 지역과 국가 간 무역이 경제적 효율을 가져온다는 주장

을 펼치게 되었고, 국가마다 특화된 생산에 초점을 두면서 자유무역을 전개한다면 이러한 노동분업은 결국 가격의 균형을 유도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온다는 견해를 형성시켰다(이승환 역, 2006).

자유주의 시장제도가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식민지를 통한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조효제 역, 2013). 식민지 건설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확대하고자 했던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통해 공업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식민지에 완제품을 수출하게 되었다. 자유주의 시장원리는 제국국가에 의한 식민지 수탈을 비교우위 논리에 따른 국제무역으로 포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방임적 시장제도는 산업화를 통해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가계층으로 자본의 집중, 노동자 빈곤과 근로조건 악화, 장기적 경기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다(Broham, 1996). 자유주의에 대한 낙관적 견해와는 달리 자본시장의 공급이 완만하게 조정되지 않았다. 자유주의 견해에서는 시장에서 상품의 포화는 자연스럽게 공급감소를 가져온다고 했으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의 경쟁에서 영세자본가들은 몰락하게 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은 대자본가들이 생산을 통한 규모경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자본축적이 진행되었다. 식민지를 통한 값싼 원료공급과 생산품의 식민지로의 판매는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생산은 1930년대 접어들어 시장의 조정기능을 넘어서는 과잉생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생산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생산의 확대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빈곤을 가져오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로운 욕구 충족이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가져오리라고 기대되었으나 자본가에 의한 노동착취가 전개되면서 노동자의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되었다. 영국에서는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조세제도를 도입하였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조합도 결성되게 되었다. 이처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하던 자유주의 시장제도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케인스주의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유주의 시장제도를 주장하던 학자들은 실업과 유휴

공장의 존재는 가격하락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세계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대규모의 실업과 유휴공장이 존재하였으나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III.

케인스는 세계대공황에 대한 자유시장의 문제점을 투자와 수요에서 찾았다(이승환 역, 2006).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가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투자가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투자를 늘리지만, 경제가 침체일 때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장기적 침체를 견게 된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이에 대해 수요의 확대만이 경제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개입과 정부지출의 확대를 통한 투자확대는 고용을 증대시키면서 점차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생산투자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케인스의 시각은 자유주의 시장제도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가져오게 되었다. 케인스주의에서 경제의 기본단위는 다름 아닌 국가였다(Martin and Sunley, 1997). 국가는 자본과 재화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였고, 복지정책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국가)에 통합시켰으며, 성장지역에서의 부는 저개발지역으로 분배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의 기본원리는 완전고용과 수요중심의 경제성장이었는데, 이를 소득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와 복지정책(welfare policy)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케인스주의에서 성장은 저축과 투자로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유효수요창출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면 소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소비의 확대는 기업 생산활동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면서 재정적 부담을 주지만 성장정책에 따른 투자효과는 산업발달과 고용성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가계의 저축이 확대되고 산업자본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본다. 성장산업의 육성과 고용 확대는 주택, 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막대한 지출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지출은 직업, 소비, 주거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었다(Martin and Sunley, 1997).

케인스주의 정책에서 성장효과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성장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내 계층 간 불균형은 발생한다고 보며, 성장의 파급효과가 주변부와 주변계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추구한다.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회복지에 유효수요를 창출하며 소비를 증진시킨다고 본다.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원해야 하며, 사회복지지를 국가가 지향할 목표로 인식한다.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은 세계대공황에 직면하여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하여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수요창출은 포디즘(Fordism)에 의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박경환 등, 2012).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안정적인 시장체계를 형성시켜주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조절은 소비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 자동차 보급의 확대는 대도시 인구의 교외화를 가져오면서 내구재에 대한 대규모 수요를 발생시켰고, 쇼핑시설의 입지를 통한 구매력을 유지시켜주었다.

반자동생산체계를 통한 대량생산은 규모경제를 통하여 기업이윤의 확대를 가져왔고, 강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게 되어 노동자의 소비증대는 소비가 미덕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노동의 엄격한 분업화와 과학적 생산관리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러한 포디즘적 생산양식은 서구 자본주의를 케인스주의 중심으로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케인스주의 개발정책에 따라 다양한 개발전략이 추진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장거점(growth pole) 개발전략이었다. 성장거점개발은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에 의한 혁신 논리와 케인스의 유효수요 창출의 원리를 토대로 프랑스 경제학자 페루(Perroux)가 구체화시킨 모델로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혁신성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므로 이들 성장산업을 성장거점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우 성장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뿐만 아니라 성장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박중화

등, 2000). 하지만 성장거점에 대한 집중적 육성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세계대공황 이후 30~40년간 서구 개발정책을 주도하던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원유가의 인상과 세계시장의 경쟁심화는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경직적인 대량생산을 지향하던 생산시설은 민감하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지 못하면서 선진 세계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Albrechts and Swyngedouw, 1989; Scott and Storper, 1992).

1973년 배럴당 3달러 이하였던 원유가는 대량생산을 지향하던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충족하게 사용되었다(Berry et al., 1997). 1974년 원유가격이 12달러로 급등하면서 대규모의 생산을 지향하던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독일의 급부상은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신흥공업국의 등장은 저가격의 제품에서 있어 국제경쟁의 심화를 가져왔다.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의 침체는 노동자의 수요감소에 영향을 주었고, 시장에서 제품의 포화는 값싼 제품에 대한 선호와 선별적인 수요패턴을 창출하면서 소비패턴에서의 급변화가 일어났다. 1979년 무슬림 근본주의에 의한 이란 통치는 제2차 오일쇼크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원유가는 배럴당 12.7달러에서 단기간에 41달러로 급상승하였다(Berry et al., 1997).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생산측면에서는 대량생산의 패턴이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유연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엄격한 노동분업과 강한 노동조합은 생산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면서 선진자본주의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침체는 케인스주의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케인스주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수요억제 정책을 사용하고,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수요확대 정책을 사용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선 수요확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키고, 수요억제는 실업 확대로 이어지면서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케인스주의 정책에 대한 한계가 제시되면서 1970년대 말에 등장한 미국과 영국의 보수정부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의 원리에 따른 개발정책이 1980년대 이후 등장하였다.

IV.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고, 사회복지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개발이 제시되었다. 시장원리를 최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시장의 개방화와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시장원리의 주장자들에 의하면, 케인스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므로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케인스주의 정책은 선진국의 발전모형을 개발도상국가에 도입시키는 과정에서 외자 도입에 의한 성장정책을 지향했으나 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에 경제침체와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위기와 채무급증은 개발도상국가의 위기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Brohman, 1996). 국가적 수준에서는 정부의 개입은 시장제도의 비효율성과 복지정책을 통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가져오면서 정책적 실패가 결국 경제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본다.

영국과 미국의 보수정부의 등장은 시장 경제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통화주의(monetarism)가 급속하게 확산하게 된다. 통화주의는 경제의 통화량이 재화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케인스주의는 통화량의 조절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하여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나타나면서 경제위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Brohman, 1996). 통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원리를 따를 것과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는데, 자유시장의 원리는 낮은 임금과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어 저축과 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은 혁신과 기술의 확산을 가져오면서 경제성장의 파급효과는 전 사회와 지역에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본다.

1979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공급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17년간에 걸쳐 정부규모의 축소와 시장원리를 지역개발의 핵심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교육, 의료, 복지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었다. 정부의 총지출 중에서 공공서비스 지출은 1970년대 말 전체의 1/3에 해당하였으나 1990년대 말에는 1/4로 감소되

었는데, 이는 약 20조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공공서비스 지출의 감소를 의미한다(강원택, 2003; Brohman, 1996).

신자유주의에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향한다. 시장메커니즘은 기술도입과 경영혁신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시장경쟁은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업을 부추기는 기업주의를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수요창출에 대한 정책보다는 교육, 인프라, 기술과 같은 공급을 통해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책적으로 강조한다. 이에 따라 지역성장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지역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정부의 개입에 의한 성장보다는 지역의 지식과 기술의 시장성과 경쟁성을 강조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에 기초한 성장 전략은 복지국가(welfare state)에서 근로국가(workfare state)로의 변화를 가져왔다(Jessop, 1994). 이로 인하여 지역 간 경쟁은 치열해졌고, 시장원리가 지역의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핵심으로 인식되었다.

시장 자유화는 생산요소의 생산과 교환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시장거래의 확대와 가격하락을 가져온다고 본다. 국제적 수준에서 세계시장의 통합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의 전문화를 가져오고 모든 국가는 시장통합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성장부문에 대한 투자보다 자유경쟁에 따른 파급효과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저개발지역의 시장 자유화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저개발지역에서 고용창출, 아웃소싱, 기술전파와 같은 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저개발지역은 시장원리에 따라 처음에는 외부 소유의 기업이 입지하게 되지만, 결국 고용창출과 연관된 생산업체가 신설되면서 지역성장을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에 의한 저개발지역의 개발정책보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저개발지역에서 성장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며, 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본다. 케인스주의 정책에 따라 미국의 경우, 1929년 총국민소득의 10%에 불과하던 정부지출이 1980년에는 약 40%로 늘어났다(김준현, 2002). 이러한 정부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나 비대화에 따른 고비용과 정책수행 결과에서의 저효율이 문제라고 본다.

시장경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위해서도 정

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일부 극단적인 정치경제학파(political economists) 옹호자들은 정부개입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경제학파에서는 자유주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시장실패(자유주의 시장제도)와 정부개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정부실패(케인스주의 시장제도)를 동시에 벗어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정치경제학파에서는 정부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너로 인식하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더 선호한다. 일부 극단적인 정치경제학파에서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Brohman, 1996). 이들에 의하면 계획가, 관료, 정치인 및 행정가는 이해집단을 위한 정책수행을 통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므로 결국 이들에 의한 정책은 공평한 분배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비록 현실세계에서 보여주는 시장원리의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부개입에 의한 정부실패보다는 낫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기구의 축소를 통한 재정지출의 감소를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구한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며, 민영화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시장원리를 통한 기업경영으로 바뀌면서 효율성이 증대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의 확대는 결국 만성적 복지병을 낳게 되므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축소를 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제도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저생산성은 결국 세금의 인상을 수반하므로 국가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V.

198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세계화 과정을 통하면서 급격하게 확대되었던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최병두, 2012).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문제를 경제력 집중, 격차 심화, 사회의 이중화 심화, 복지축소, 환경문제 대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집중을 야기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은 경쟁력 있는 자본가들에게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결국 자본이 소수의 계층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

서는 선진국의 경제력 집중이 커지게 되면서 선진국 간 무역이 크게 증대하였다.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1938년 65%가 개발도상국가에 투자되었으나, 2000년에는 약 88%의 해외직접투자가 선진국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67%는 선진국에 투자되었다(Dicken, 2003).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가의 주된 수출품목인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거나 소폭 인상되는 반면에 이들 국가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이 결과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는 침체를 지속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개발도상국가의 국내총생산에서 투자 비율은 약 20~30% 감소하였고, 선진국으로부터 투자는 1980년대 초반 600~800억 달러에서 1980년대 후반 120~15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Brohman, 1996).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대규모 자본투자를 가능하게 하면서 투기적 활동이 증대하였고,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투자와 개발이 집중되면서 공간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의 등장은 저개발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단,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지원 감소, 공공서비스의 공급 감소 및 지방 공공기업의 민영화, 정부의 지방기업과의 거래 감소 등을 가져오면서 성장지역으로 경제의 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다(Amin, 1999).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국가 간, 지역 간, 개인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자유화는 자본의 재분배를 가져오기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소득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최병두 역, 2007; Black, 1991). 이로 인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 간 소득 격차가 증대하였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소득중대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국, 인도 등 세계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일부 국가에 국한되었다.

국가의 토지, 노동, 자본, 기술이 성장지역에 의해 지배되면서 저개발지역은 성장지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성장지역의 기업이 저개발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고용창출과 기술전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저개발지역의 산업구조가 성장지역의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를 가져왔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 상위 계층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에 중산층의 실질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커져가면서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Brohman, 1996).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서도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하였다. 개발도상국가의 저소득층 실질임금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장자유화는 국내시장을 지향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침체를 가져오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고, 노동의 탈규제화는 실업과 노동자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조의 중단은 식량과 생필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교육과 의료비용의 감축은 인적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은 하락하게 되었다고 본다(조효제 역, 2013; 최병두 역, 2007).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중산층 계층의 몰락을 가져오면서 소수의 상위계층과 다수의 하위계층으로 참여한 극화가 전개되는 사회의 이중화(dualism of society)를 가져오고 있다. 특권을 가진 상위계층의 소득과 지위는 향상된 반면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지위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권층은 수출지향적인 정책에 따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영세한 생산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조효제 역, 2013; Stewart, 1991). 선진국의 다국적기업과 특혜를 받은 소수의 대자본이 농산물시장을 지배하면서 영세한 농산물 생산업체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재화가 싼 가격에 유입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부의 지원 중단은 영세업체의 수익 감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노동비용의 감소, 열악한 노동환경, 아동과 여성의 노동력 착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Brohman, 1996). 반면에 저소득층은 임금감소, 생필품의 가격상승, 사회보장제도 축소로 인하여 생활수준의 저하가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가장 타격을 받은 계층은 가난한 여성과 아동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심한 노동착취를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다(Elson, 1991; Geisler, 1992; Potter *et al.*, 2012).

넷째, 시장자유화 정책은 시장경제의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기본육구, 빈곤, 인적자원 개발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최병두, 2012).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실업증가와 노동조건의 악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빈곤의 확대에 따른 각종 도시 및 사회문제(주택, 환경, 교육, 보

건, 아동학대, 폭력, 범죄)는 개발도상국가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식량원조, 교육, 의료 서비스 등에서의 정부지출 감소는 결국 저소득층의 도시 및 사회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1970년대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각종 도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사회비용이 파생되었고, 현재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시장제도는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조효제 역, 2013)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전개되고 있으나 국가의 개입이 약한 시장메커니즘에서는 자원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술의 진보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단 기간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발도상국가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Brohman, 1996; Riddell, 1992; Potter *et al.*, 2008). 탈규제, 자유화, 수출지향적 정책은 비재생자원의 파괴를 가져왔고, 선진국 오염유발산업의 생산시설이 입지하는 오염도피(pollution haven) 장소로 등장하였다. 대규모의 자원개발, 산업화, 농업의 기업화는 개발도상국가의 환경파괴를 가져오면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도 국가의 개입과 조절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국가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국가는 영역을 관리 및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무역과 산업정책에서 국가의 개입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 스스로 기업주의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

지역개발은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탈규제화, 민영화, 개방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다른 아닌 국가이며, 국가의 개입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국가에

의해 공급되던 공공서비스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줄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역개발정책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에서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인스정책에 입각한 원조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개방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인간개발, 환경보호, 불균등 완화가 추구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지역개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미래의 개발 방향을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세계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의 대안과 미래의 개발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향하는 대표적 국제기구는 World Bank와 IMF라고 볼 수 있으며, 인권과 사회개발에 초점을 둔 대표적 국제기구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발정책의 메커니즘이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World Bank와 IMF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해소를 고려한 방향에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UNDP를 중심으로 한 인간개발에 초점을 둔 개발에서는 인간개발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이 추구될 수 있는 개발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개발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신국제조절 메커니즘에서는 화합과 상호존중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간의 타협과 상호존중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극단적인 갈등을 쉽게 해소하기 힘들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비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선진국으로부터 강하게 제시되어 왔으나, 정작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관세의 주된 품목은 주로 개발도상국가가 경쟁적 이점을 갖는 농산물과 노동집약적 제조업분야이다(주성수 역, 2010; World Bank, 2002). 이러한 국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다양한 비정부조직(NGO)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된 개발정책은 경제성장에 지나친 초점이 두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권, 민주, 빈곤, 불균형을 고려하는 인간개발이 대두되었다(Clarke, 2002; Potter *et*

al., 2008).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인간개발에서는 현실문제를 인식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인간개발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향후 인간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가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원적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경제개발과 인간개발에서 추구하는 형평성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적인 번영과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의 효율성, 분배의 형평성, 환경의 지속성을 기본 원칙으로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형평, 지역 간 형평은 나눔과 분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개발전략이며, 최근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이 신개발전략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이용균, 2014).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것으로 생산지의 생산 및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해 선진국의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당면한 사회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이다.

환경문제는 국가 간 합의와 중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국가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 간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이 가능하다.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환경협약이 개발도상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국제적 수준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예를 들어, 지구 환경변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서 전 세계인구의 4%를 차지하는 미국은 25%를 방출하고 있으며, 선진 7개국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세계의 70%에 달한다(World Bank, 2002).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세계발전을 위해 더 많은 환경관련 비용을 지불함과 동시에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의 대안과 미래 개발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개발의 방향으로 지역 간 상호보완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가적 수준의 개발 전략으로 '네트워크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네트워크 정부란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과 보완적 관계를 토대로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네트워크 정부의 형태란 큰 의미에서는 노동 및 산업정책에서 케인스주의(거시정책)와 신자유주의(미시정책)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개발은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도 정부주도적이 아닌 분권화된 정책 추구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권화된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연관된 분야에 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이해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권형 지역개발은 지역이기주의로 변색할 우려가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에 따르는 성장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지역 간의 균형된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적 발전에 대한 추구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발전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네트워크형 지역개발과 분권형 지역개발에서 추구하는 핵심적 목표는 지역의 내생적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경쟁력과 지속적 발전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성장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생적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원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친환경성과 인간개발에 초점을 둔 지속적 발전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사회참여와 사회적 권한 부여에 대한 논의가 신중히 전개되고 있는데, 소외된 계층의 사회참여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득 분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은 분권화된 지역개발과 참여형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Smyth *et al.*, 2004). 이러한 사회참여는 케인스주의 정책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를 개인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복지수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이다. 또한, 사회참여는 성장보다는 인간에 초점을 둔 개발전략이란 점에서 단기적 효율성 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한다.

본 연구는 서구에서 전개된 지역개발의 패러다임 변

화를 살피면서 개발의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이 공간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미래의 개발 방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뚜렷한 포스트개발(post-development)의 방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개발지리학의 연구는 지역과 계층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영국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앙-지방의 관계,” 국제정치논집, 43(3), 385-400.
- 김준현, 2002,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의 윤리,” 담론 201, 5(2), 44-79.
- 박경환·류연택·정현주·이용균 공역, 2012,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Knox, P. and Pinch, S., 2010,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6th Edition), New York: Pearson Education Limited).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2000,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서울: 박영사.
- 이승환 역, 2006,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서울: 김영사(Buchholz, T., 1989, *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 Thought*, New York: A Plume Book).
- 이용균, 2006, “인문지리학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맥락적 접근의 필요성,” 문화역사지리, 18(3), 91-106.
- 이용균, 2014, “공정무역의 가치와 한계: 시장 의존성과 생산자 주변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99-117.
- 조효제 역, 2013,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서울: 교양인(McMichael, P., 2011,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Los Angeles: Sage).
- 주성수 역, 2010, 「빈곤에서 권력으로: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 이매진(Green, D., 2008, *From Poverty to Power: How Active Citizens and Effective States Can Change the World*, Oxford: Oxfam International).

-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서울: 한울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 정책」, 서울: 한울.
- Albrechts, L. and Swyngedouw, E., 1989, The challenges for regional policy under a flexible regime of accumulation, in Albrechts, L. ed., *Regional Policy at the Crossroads*, Jessica Kingsley Publishers, 67-89.
- Amin, A., 1999,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3, 379-395.
- Berry, B., Conkling, E., and Ray, M., 1997, *The Global Economy in Transition*,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 Black, J., 1991, *Development in Theory and Practice: Bridging the Gap*, Boulder: Westview.
- Brohman, J., 1996, *Popular Development: Rethink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velopment*, Blackwell, Oxford.
- Clarke, R., 2002, Introduction, in Kirkpatrick, C., Clarke, R. and Polidano, C. eds., *Handbook on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Edward Elgar, Cheltenham, 1-12.
- Dicken, P., 2003, *Global Shift: Reshaping the Global Economic Map in the 21st Century*, London: The Guilford Press.
- Elson, D. ed., 1991, *Male Bias in the Development Process*,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Geisler, G., 1992, Who is losing out? Structural adjustment, gender and the agricultural sector in Zambi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0, 113-139.
- Jessop, B., 1994, Post-Fordism and the state, in Amin, A. ed., *Post-Fordism: a Reader*, Oxford: Blackwell, 251-279.
- Martin, R. and Sunley, P., 1997, The post-Keynesian state and the space economy, in Lee, R. and Wills, J. eds., *Geographies of Economies*, London: Arnold, 278-287.
- Potter, R., Binns, T., Elliott, J., and Smith, D., 2008, *Geographies of Development: An Introduction to Development Studies*, Pearson, Essex.
- Potter, R., Conway, D., Evans, R., and Lloyd-Evans, S., 2012, *Key Concepts in Development Geography*, Los Angeles: Sage.
- Riddell, J., 1992, Things fall apart again: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0, 53-68.
- Roobeek, M., 1987, The crisis in Fordism and the rise of a new technology paradigm, *Futures*, 19, 129-154.
- Smith, A., 1986 (1776),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Penguin Books.
- Smyth, P., Reddel, T., and Jones, A., 2004, Social inclusion, new regionalism and associational governance: the Queensland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8(3), 601-615.
- Soctt, A. and Storper, M., 1992, Regional development reconsidered, Ernste and Meier, eds.,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Industrial Response: Extending Flexible Specialization*, London: Belhaven Press, 3-24.
- Stewart, F., 1991, Are adjustment policies in Africa consistent with long-run development needs?, *Development Policy Review*, 9, 413-436.
- World Bank, 2002, *Globalization, Growth, and Poverty: Building an Inclusiv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World Bank.
- 교신 : 이용균,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yonggyunlee@hanmail.net)
- Correspondence : Yong Gyun Lee, 500-75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yonggyunlee@hanmail.net)
- 투 고 일: 2014년 11월 16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5일
투고확정일: 2014년 12월 10일

